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주정



지자체 통합 논란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30일까지 행정구역 자율통합 검의 서가 제출되면 드러나겠지만, 요란했던 출발에 비하면 성과가 끊 같지는 않다. 초반에는 47개 시·군이 17개 통합시로 합칠듯했다. 그러나 31개 시·군에서 마찰이 빚어지면서 결과가 불투명해졌다. 통합 학의 지역도 연말까지 새로운 지명과 통합청사 위치 등을 정하고 주민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부도 잘해야 2~3곳 정도가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략의 대상으로 전락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국회에 주문하고, 행정안전부가 과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며 대대적으로 독려한 것치고는 초라한 성적이다. 성공한 몇 곳을 모델로 다시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에 성공하지 못한 지자체나 주민 사이의 갈등과 반목은 두고두고 상처로 남아 지방의 발복을 잡을 가능성이 커 전했다.

道 없애서는 안된다

다 많은 권한 이양'과 '잘 사는 고장 만들기'라는 지방의 목소리에 충실했다기보다는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중앙의 논리가 앞섰던 것이다.

방법부터 틀렸다. 중앙 정부가 주도해 '100년 된 행정구역'을 100여 일 만에 바꾼다는 발상부터 통합의 주체인 주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자율통합을 내세우지만 통합시의 명칭이나 시청사 위치 등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숨긴 채 거액을 지원한다고만 선

권 구성을 구체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군을 통합해 행정계층을 줄이려는 이중적인 행보다.

정치권의 계획대로라면 230개 기초단체는 70여 곳으로 통합되고 광역단체인 도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와 지방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기초단체가 멀어진 주민들은 쓰레기 등 사소한 생활민원을 들고 통합시로 달려갈 것이다. 지방정부는 미래발전 전략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경제통합이 키워드

물론,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은 아니다. 개편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경찰·교육 등 지방자치의 핵심 권한을 도로 이양하는 등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권한 중복을 없애고, 주민들이 법에 따라 지역 사정에 맞맞은 경제적인 통합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중장집권으로 회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역민들의 복장만 타자지게 하고, 자체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고, 국가에도 해로운 길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옥영석



사흘이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

더위도 물려가고 서늘한 바람이며 청명한 하늘이 가장 아름다울 때. 넓은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물들며 온갖 과일에 먹을거리 풍성해지니 이를 거둔 조상에 감사하고 이웃과 즐거이 나누는 게 우리네 풍습이다.

새 해 각오를 다지는 "설"도 있고 오곡밥에 불놀이가 즐거운 "대보름"도 있지만 "더도 덜도 맑고 한가위만 같아

추석선물 아직 못 고르셨다면

라는 말대로 추석처럼 풍요롭고 감사한 명절이 또 있을까.

하지만, 어느 때보다 풍년을 구가할 것 같은 올 추석이 달갑지만 않은 것은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 서다.

지난해 생산된 벼가 아직 창고에 가득한데 수확기는 코앞이고 사과, 배가 겪은 평년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피부에 와 달지 않는데 부모마음이야 객지에 나간 아들딸이 걱정이고 그 아들딸들은 또 그런 부모마음이 걱정이다.

그렇다고 이 추석을 우울히 보낼 일만은 아니다. 세계적인 불황이야 우리 만 겪는 일 아니고 신종플루가 무섭다

해도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다 한다. IMF체제하의 압박하던 시절에도 명절은 있었지만 지난고 보니 그리 우울히 살일만도 아니었지 않은가.

나리도 먼저 분위기 한 번 띠워 보자. 멀리 있던 친척들에게 성묘는 언제 오는지, 함께 뛰어 놀던 친구에겐 아이들 균황이라도 물어 보고, 그동안 신세져 왔던 은인들에게 부담 없는 우리 농산물로 고마움을 전해보자. 마음 같아서 야 몇십 만원씩 들여 금빛 줄 두른 박스

를 보내고 싶지만,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닌 애물단지다.

갖고 싶고 먹어 보고 싶었지만 내 돈들여 선뜻 사기가 어려운 버섯류나 꽃감, 잣이나 호두는 주부들에게 환영받는 품목이다. 여름 햇살 가득 머금은 사과나 배, 매텁은 제철과일이라 좋고, 고구마나 양파·즙 등을 그리 비싸지 않으면 받는 분들이 고마워하는 아이템이다.

며칠 뒤 성묘 길에서 만나 "뭐 그런 걸 다 보냈느냐" 물으면 너무 약소하니 미안해 하며 손사래를 치시라.

추석을 빌려 술 몇 잔 짚으로 평소의 무관심을 면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05. 7월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칠판을 싣는 코너입니다.

한식 세계화 위해 '코리아 셀렉트' 만들었으면

작년 말에 태국 대사관에서는 '타이 셀렉트(Thai Select)' 수여식이라는 게 열렸다. 태국이 해외에 있는 태국식당에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맛과 서비스, 위생을 갖춘 음식점'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에서 태국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 중에 9개 식당이 '타이 셀렉트'를 신청했지만 3곳만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태국이 자국 음식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태국 음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 전라도는 드넓은 평야와 청정 농산물, 그리고 청정 바다에서 나오는 풍부한 수

산물까지 갖춘 곳이다. 한식을 대표하는 전라도 비빔밥부터 시작해 우리가 사랑하고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음식이 부지기수로 많다. 즉 우리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리나라 정부 당국과 전라남북도 자체단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태국의 사례를 배우고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전남북 자체단체와 정부가 함께 한식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전세계에 '코리아 셀렉트'라는 걸 만들어 추진한다면 우리 음식의 세계화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크게 꾀할 것이다.

▲이다웅·전남 여천시 평려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기고

고재권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더욱 부흥시키고 생명, 환경, 전통 문화가 조화된 평화로운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70년대 쌀 부족으로 배고픔에 허덕이고 보릿고개가 한창일 때 지방개량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과 벼금가는 이 운동은 농업인의 의식개혁을 변화시켜 농업·농촌을 선진화하고자 크게 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철로 벼에 색상이 화려한 벼를 이용하여 글씨나 그림을 새겨 다양한 불가리를 제공하고,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빙당식물공장은 저탄소 발광ダイオード(LED)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개화나 수확시기, 비타민 성분을 조절하는 기술 등을 할 수 있다. 지붕에 잔디를 심어 단열이나 보온을 하고 풍력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통 농업기술과 최첨단 지식을 활용한 생명환경농법, 벚꽃을 이용한 벽돌로 새로운 소

녹색기술, 푸른 농촌에서 시작한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기 운동, 둘째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동, 셋째는 농업인의 의식을 선진화하는 운동으로 현대 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문제와 농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 의지와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이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펼치는 것은 최근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중 농업 부분의 새로운 비전 제시는 농업과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을

융합하여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물질이나 신소재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감귤 쌀, 과채류의 접목로봇, 별침을 이용한 채집기, 실크로 만든 인공뼈와 인공 고막, 인간의 장기 대체하는 무균재지, 컬리 누에 등 농업 분야의 새로운 변화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용가치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도 다양한 음·복합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립적 경영 주체로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에 확고한 위상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그리고 농업도 다양한 음·복합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립적 경영 주체로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에 확고한 위상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제를 창출해내는 녹색기술 친환경 주택을 만들기도 한다.

기존 농업의 개념과 영역은 식량작물을 재배하고 생산을 주로 하였다. 앞으로 농업은 보고 즐기는 농업, 같이 공감하고 생활하는 농업, 질병을 치료하는 농업뿐만 아니라 광장형 농업, 고부가 가치 최첨단 농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희망과 비전의 농업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인 21세기에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쌓을 수 있도록 의식선진화 운동이 필요하다. 정체되어 가는 농업·농촌에 새 활력을 불어 넣어 과거의 새마을 운동을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으로 발전시켜 그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도 다양한 음·복합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립적 경영 주체로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에 확고한 위상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그리고 농업도 다양한 음·복합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립적 경영 주체로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에 확고한 위상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어차피 행사에 물이 필요하다면 쓰레기 1인당 1통씩 무작정 지급할 게 아니라 2~3명당 1통씩 주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지급하는 게 환경오염도 막고 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렇게 마구 버려지는 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벼육증재배과장

행사때 사용되는 생수, 낭비 심하다

며칠 전 모 공공 단체에서 관계자들을 초청해 앞으로의 사업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후 약간 "이건 아닌데" 하는 일을 목격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쪽으로 갔더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500밀리리터 생수병을 수십 개 들고와서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을 죄다 버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아주머니가 들고온 수십 개의 생수병은 조금전 탁자에 1인당 1개씩 놓여져 있던 것들이었다. 이미 마개를 끊은 생수병에 없으니 병만 재활용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족 국가인데 이렇게 함부로 아까운 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가면 주최 측에서 개인들에게 생수를 지급하는 것이 요즘은 흔하다. 그런데 대부분 참석자가 물을 마셔버리자 한두 모금뿐이다.

어차피 행사에 물이 필요하다면 쓰레기 1인당 1통씩 무작정 지급할 게 아니라 2~3명당 1통씩 주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지급하는 게 환경오염도 막고 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렇게 마구 버려지는 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병희·광주 북구 신용동

시설

예산 삭감으로 제동 걸린 지역 현안사업

주가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올해는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탓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정치권이 치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사상 유례없는 예산 확보전쟁'을 벌였다. 대구시와 부산시가 각각 3조원대의 국비 예산을 배정받은 것도 이 같은 공조가 한몫 했다.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시·도와 지역 정치권 간 공조체제가 빠져나온다. 정부의 예산에 흡수되는 예산은 예상보다 적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전에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해온다.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치권이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불성 사나운 모습도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여권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심의에서 제외되거나 삭감된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쌀 근본적인 수급 대책 세워야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수확기를 맞은 벼를 갈아엎고 단식투쟁을 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산지 벼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40kg당 4만8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2%나 하락했다. 엊친 데 덧친 격으로 올해 벼 수확량은 평년작(457만t)을 넘는 465만t 수준이 접혀지고 있다. 쌀값 불안에 대한 농민들의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쌀값 폭락은 쌀 수급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다. 95년 106.5kg이던 1인당 연간 밥쌀 소비량은 지난해 75.8kg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쌀 가공세(시장 개방) 유보의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최소시장집근(MMA) 물량이 30만t을 웃돈다. 현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중단된 것도 쌀값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수확기 매입 물량을 지난해보다 23만t 늘리고 공공비축미 18만t을 격리하는 등 쌀값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공공비축물량의 확대, 변동지불금 목표가격의 최저생산비 수준 향상 등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북 쌀 지원 재개와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쌀소비 진작책도 뒤따라야 할은 물론이다.